

주간 농업·농촌 동향

주요 농정 이슈

농산물 표준규격 개정

거시경제 동향

2013년 11월 생산자물가지수

기획정보

농업·농촌에 대한 2013년 국민의식조사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연구 지원 정보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동향 분석 실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동향분석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농정 이슈

농산물 표준규격 개정

※ 본 자료는 2013년 12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농산물 표준규격”을 현실에 맞게 개선: 산지유통 및 소비자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포장규격 및 등급 규격 조정」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개요

- **[농산물 표준규격 개념]** 농산물 상품성 향상, 유통효율 제고, 공정한 거래 실현을 위한 농산물 선별·포장·유통 기준
- **[구성]** 포장규격 + 등급규격
 - (포장규격) 거래단위, 포장치수, 포장재료, 포장방법, 포장설계 및 표시 사항 등
 - (등급규격) 품목 또는 품종별 특성에 따라 고르기, 크기, 형태, 색깔, 신선도, 건조도, 결점, 속도 및 선별상태 등
- **[운영현황]** 등급규격 80품목, 거래단위 120개 품목이 제정·운영
- **[개정사항]** 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 환경에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자료조사를 실시하여 반영(2014.1.1일부터 시행)
- **[기대효과]** 농산물 표준규격 개정으로 농산물의 규격화를 촉진하고 유통 효율을 높이며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

□ 주요내용

1) 포장규격

- **[화훼류 중 절화류 기준]** 골판지상자 높이 기준 제한(300mm이내)을 삭제하여 농가에서 포장을 보다 효율적할 수 있도록 기여
 - (개정사유) 종류 및 출하시기에 따라 제품의 크기가 다양하므로 높이를 제한하면 농가에서 출하 어려움

○ **[사과, 배 골판지 상자 인쇄도수 기준]** 사과, 배 골판지상자의 인쇄도수를 3도 이내에서 4도 이내로 완화

- (개정사유) 보편화된 제작형태(4도 이상), 생산자단체의 완화 건의 및 1차 식품 친환경포장 실천 수칙 등을 감안

○ **[2가지 이상 혼합품목 기준]** 2가지 이상 품목을 혼합하는 제품도 표준 규격품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개정사유) 과실 혼합제품(사과배 등)의 유통 증가

2) 등급규격

○ **[사과, 배 크기 구분]** 7단계(3L, 2L, L, M, S, 2S, 3S) 중 3S 삭제

- (개정사유) 사과 167g미만, 배 333g미만은 상품성이 낮고 유통량이 거의 없어 등급구분 실효성 미미

○ **[방울토마토의 신선도 구분]** ‘꼭지가 시들지 않고 과피의 탄력이 뛰어난 (양호한) 것’에서 ‘꼭지가 시들지 않고’ 부분 삭제

- (개정사유) 방울토마토는 수확 후 바로 꼭지가 시들지만 과피의 탄력은 장기간 유지되는 특성

○ **[토마토 크기 구분]** 소형 토마토(흑토마토, 캄파리)의 크기 구분 추가

- (개정사유) 크기가 작은 품종의 생산유통 확대

거시경제 동향

2013년 11월 생산자물가지수

※ 본 자료는 2013년 12월 17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3년 11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전반적 동향

○ **[생산자물가지수] 전월대비 0.2% 하락**

※ 전년 동월대비 0.9% ↓

- **(농림수산물)** 채소, 수산물이 올라 **전월대비 0.5% 상승**

※ 전년 동월대비 2.4% ↓

- **(공산품)** 1차금속제품 및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4% 하락**

※ 전년 동월대비 2.1% ↓

- **(서비스)** 운수가 올랐으나 금융및보험이 내려 **전월대비 보합**

※ 전년 동월대비 0.5% ↑

〈생산자물가지수 등락률〉

단위: %

구 분	가중치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13.8월	9월	10월	11월p	13.8월	9월	10월	11월p
총 지 수	1000.0	0.3	-0.1	-0.4	-0.2	-1.3	-1.8	-1.4	-0.9
농 립 수 산 품	33.8	5.4	-1.6	-5.7	0.5	-4.6	-8.0	-6.8	-2.4
식 량 작 물	7.2	1.0	-0.9	-0.2	-3.4	5.0	4.1	5.1	-2.8
채 소	6.6	25.2	-5.3	-17.8	2.7	-0.5	-21.8	-21.9	-17.0
축 산 물	8.5	2.9	0.8	-3.5	3.3	-0.1	6.3	10.8	8.9
수 산 물	5.5	0.0	-3.9	-5.6	-2.1	-3.0	-7.4	-11.2	-11.1
공 산 품	611.4	0.1	-0.1	-0.4	-0.4	-2.5	-3.1	-2.5	-2.1
석탄및석유제품	57.8	0.0	-0.3	-2.7	0.0	-3.9	-6.9	-7.4	-4.5
화 학 제 품	107.5	0.6	-0.2	-0.1	-0.5	0.3	-1.5	-1.6	-1.0
1 차 금 속 제 품	115.1	-0.1	0.0	0.2	-1.4	-9.5	-9.2	-5.7	-6.0
전기및전자기기	89.1	-0.1	-0.4	-0.9	-0.6	-2.2	-2.5	-2.9	-2.4
전력·수도·가스	54.3	0.3	0.0	0.2	0.7	4.3	4.3	4.5	5.4
서 비 스	298.1	0.2	0.0	0.2	0.0	0.4	0.4	0.5	0.5
음식점 및 숙박	41.0	0.3	-0.5	0.0	0.0	1.6	1.7	1.6	1.6
운 수	50.6	0.2	-0.6	0.8	0.1	1.0	1.1	1.1	1.3
금 융 및 보 험	30.9	0.2	0.6	0.1	-0.2	-5.9	-5.8	-5.4	-5.1
사 업 서 비 스	40.4	0.1	0.1	-0.1	0.0	0.6	0.3	0.3	0.4

주: 당월 지수는 잠정치(preliminary)이며, 익월 지수 공표 시 확정됨.

□ 특수분류별

○ [식료품] 전월대비 0.1% 상승

※ 전년 동월대비 1.2% ↓

○ [신선식품] 전월대비 0.1% 하락

※ 전년 동월대비 10.6% ↓

○ [에너지] 전월대비 0.3% 상승

※ 전년 동월대비 0.8 ↑

○ [IT] 전월대비 0.5% 하락

※ 전년 동월대비 2.4% ↓

○ [신선식품 및 에너지 이외] 전월대비 0.2% 하락

※ 전년 동월대비 0.9% ↓

〈특수분류 지수 등락률〉

단위: %

구 분	가중치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13.8월	9월	10월	11월p	13.8월	9월	10월	11월p
식 료 품	64.8	2.5	-0.8	-3.0	0.1	-2.1	-4.2	-3.5	-1.2
식료품이외	935.2	0.1	-0.1	-0.2	-0.2	-1.2	-1.6	-1.2	-0.8
신 선 식 품	14.5	10.1	-4.0	-11.5	-0.1	-12.2	-22.2	-23.1	-10.6
신선식품이외	985.5	0.2	-0.1	-0.2	-0.2	-1.1	-1.4	-1.0	-0.7
에 너 지	92.4	-0.2	-0.1	-0.9	0.3	0.3	-1.0	-0.9	0.8
에너지이외	907.6	0.3	-0.1	-0.3	-0.2	-1.5	-1.9	-1.4	-1.0
I T	109.2	-0.1	-0.3	-0.7	-0.5	-2.0	-2.3	-2.6	-2.4
I T 이 외	890.8	0.3	-0.1	-0.3	-0.2	-1.3	-1.7	-1.2	-0.7
신선식품및 에너지 이외	893.1	0.2	-0.1	-0.1	-0.2	-1.3	-1.4	-1.0	-0.9

주: 당월 지수는 잠정치(preliminary)이며, 익월 지수 공표 시 확정됨.

기획정보

농업·농촌에 대한 2013년 국민의식조사

※ 본 자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제82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3년 국민의식조사」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작성한 것임.

□ 조사개요

【중점조사내용】

- 이번 농업·농촌에 대한 2013년 국민의식조사는 농정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반응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데 역점

【조사방법】

-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파악, 올해 2월 출범한 새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기대와 요구 및 정책 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조사로 설계, 방문면접 및 우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사 실시

【조사대상】

- 도시민(면접 1,500명): 전국 도시지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대상, 지역·성·연령별 인구비례 할당 표본추출, 1:1 방문 면접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2.5%p
- 농업인(응답자 552명): 당 연구원 전국 현지통신원 1,000명 대상 우편조사
※ 당 연구원 현지통신원은 연구 활용 목적으로 구성된 농가로, 각 인구특성별 분포는 농촌사회 평균 수준을 다소 상회하고 있음에 유의

□ 주요내용

1)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과 가치 인식

- [농사 10명 중 3명만 만족, '농사여건 악화'] '만족한다' (33.0%), '불만이다' (34.2%) 응답해 비슷한 수준
※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농업인(n=189)의 불만족 이유는 '농자재값 상승'(30.7%), '소득 감소'(29.6%), '농산물 수입 증가로 가격 경쟁력 저하'(25.4%), '정부의 관심과 지원 감소'(10.1%) 등
- [농가 경영위험 요인] '일손 부족' (16.7%)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FTA 등 개방 확대' (16.2%), '농업 생산비 증가' (16.1%) 등 순
- [농업의 발전 가능성 인식] 농업인 '부정적' (64.7%) 응답이 '긍정적' (19.0%) 응답보다 3배 이상 높은 반면, 도시민은 '긍정적' (34.6%) '부정적' (26.0%) 응답해 도시민이 농업인보다 긍정적

2) 새 정부 농업정책에 대한 기대와 정책 수요

- [새 정부 농정에 대한 농업인 기대감] 농업인은 ‘복지정책’에 대해 기대한다는 응답 비율 36.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소득정책’ (32.6%), ‘소바유통’ (24.8%), ‘농업정책’ (22.1%) 순
- [FTA로 인한 농업 피해 보상 인식] 도시민 10명 중 6명 정도(60.4%) ‘국가 차원에서 농업에 대한 별도의 보상책 마련’, 다음으로 ‘이익이 예상되는 분야의 이익을 농업 분야에 배분’ 33.1%
 - ※ 농업인 68.3%, 도시민 41.9%가 ‘불공평’하다고 응답해 농업인이 보상에 대한 공평성에 더 부정적
- (한-중 FTA) 농업인, 도시민 모두 ‘협상 타결되면 국내 농업은 큰 피해가 불가피’ 하다는 의견은 각각 58.5%, 34.5%
- (한-중 FTA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 농업인 5.6%, 도시민 21.9%
- [농업인 절반 ‘창조경제’ 잘 모른다] ‘안다’ 48.2%, ‘모른다’ 48.0%
 - (내년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농업-농촌 정책 현안) ‘한-중 FTA 협상 문제’ (27.7%),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23.1%), ‘쌀 관세화 유예 종료 2014년 대책’ (14.2%), ‘농식품부 예산 증액 확보’ (11.6%) 등의 순
- [도시민, 농업 농촌 관련 가장 우려하는 문제] ‘농촌인구 노령화로 인한 시골의 공동화’ 41.3%로 가장 높아
 - (도시민, 가장 관심 있는 농업정책 분야) ‘안전한 식품 공급’ (20.6%),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14.7%), ‘농산물 가격’ (13.5%) 순

3) 도시와 농촌의 생활환경 차이 인식과 정주 의사

- [주거 환경 만족도] ‘만족한다’ 응답은 도시민 48.4%, 농업인 34.6%, ‘불만이다’는 각각 8.3%, 22.3%
 - (농업인 분야별 지역생활 만족도) 불만이라는 응답은 ‘소득원·일자리 환경’ (59.4%), ‘문화·체육·여가 환경’ (53.6%), ‘교육 환경’ (44.6%) 순
- [도농 간 생활수준 격차 인식] 농업인 67.2%, 도시민 53.0% ‘심각하다’ 응답, 농업인이 도시민보다 도농 간 생활수준 격차 심각하다고 인식
 - (현재 농촌지역의 경제 상황) 농업인 ‘좋지 않다’ (70.3%), ‘좋다’ (4.7%) 응답, 도시민은 ‘보통이다’ (45.5%), ‘좋지 않다’ (41.0%)

- [은퇴 후 귀농·귀촌 여부] 도시민 ‘이주 의향이 있다’ (43.6%), ‘이주 의향이 없다’ (52.7%) 응답해 도시민 10명 중 4명 귀농·귀촌 의향
 - (귀농·귀촌을 하기 위한 조건) 도시민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입원’을 32.1%로 가장 많이 응답, 이어 ‘이주에 필요한 자금’ (13.5%),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 (12.6%) 등의 순
- [귀농·귀촌에 필요한 정책] ‘귀농·귀촌 방식/사례에 대한 정보 제공’ (20.7%), ‘농·어업 기술 교육 실시’ (19.0%)가 가장 많았고, 이어 ‘농지 구입, 주택 구입 지원’ (16.7%) 등의 순
 - (현재 거주하는 마을에 귀농·귀촌한 가구 수) 농업인에게 물어본 결과 ‘한 가구 이상 있다’ 56.4%, ‘없다’ 39.1%
 - ※ ‘1~2가구’ 36.8%로 가장 많았으며, ‘3~4가구’ 11.4%, ‘5가구 이상’도 8.2%
 - (귀농·귀촌한 가구가 있다는 응답자(n=336) 대상 귀농·귀촌한 가구 적용 여부) ‘잘 적용한다’ 26.4%, ‘적용 못 한다’ 16.3%

□ 시사점

- 농업·농촌에 대한 2013년 국민의식 조사에서 농업인이 도시민에 비해 농촌 현실과 미래를 보는 의식이 상대적으로 부정적
 - 도시민들이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라는 점은 희망적인 요소로 파악
- 농사에 불만족하다는 농업인 비율이 만족한다는 비율과 비슷한 30%대 수준인 가운데 불만족 요인으로 농자재값 상승, 소득 감소로 나타나 농가 소득안정 대책 요구
 - 농업인들이 체감하는 경영위험 요인으로는 ‘일손 부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목하고 있어 실질적인 해소대책 필요
- 농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농업인 64.7%가 부정적이라고 응답, 향후 10년 후 한국농업의 미래에 대해서도 54.3%가 비관적으로 전망
 - 도시민도 10년 후 농업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우세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중장기 비전 제시 필요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 본 자료는 12월 16일~20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

□ 미국 정부, 통상 압력 본격화

-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보, 12.12일,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한국의 TPP 참여**’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현재 12개국에 진행 중인 TPP 협상은 사실상 최종 단계, ▲한국을 포함해 새로운 국가들을 참여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 ▲한국은 TPP 가입에 앞서 한미 FTA 이행과 관련한 우려사항부터 해결,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합의했으므로 자연스럽게 TPP 회원국이 될 수 있지만 그와 관계없이 의회와 이해당사자들이 우려하는 양자 간 현안들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 또한 ▲한미 FTA 이행 관련 금융서비스 자료 공유, 자동차 비관세장벽, 유기농 제품인증*, 원산지 검증 등 TPP에 참여하기 위해 해야 할 일 네 가지 문제 거론하며 통상 압력 본격화할 가능성 시사. 한편 미국 정부, 12.16일, TPP 점검회의에서 국방부는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미국의 참여 확대**’**라는 자료를 통해 미국의 미래변경과 안보가 이 지역과 직결돼 있음을 다시 강조, 이 지역 동맹 국가들을 위해 외교 및 공공정책, 군사, 원조 분야에서 투자 강화

※ ‘유기가공식품 관리체계 일원화’ 겨냥, 현재 우리나라는 유기가공식품에 대해 ‘표시제’, ‘인증제’ 모두 운영 중이지만 2014.1.1.일부터 표시제 폐지, 인증제 운영하기로. △표시제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전 세계 348개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의 인증서 획득하면 제품에 ‘유기’ 표시 가능한 반면 인증제는 유기가공식품의 원료 생산부터 인증까지 국내 기준 따라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표시제는 인증제보다 유기가공식품을 수출 하기에 훨씬 유리

※※ 캐나다 및 아태 지역 10개국과 함께 TPP 협상을 진행하는 오바마 행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는 목표 아래 협상 당사국 강하게 압박

자료 : 경향신문·서울신문·조선일보·중앙일보·한겨레·한국경제·한국일보(2013.12.14.) / 연합뉴스(2013.12.17.) / 농민신문(2013.12.20.)

□ 농해수위, ‘쌀 목표가격’ 정하지 못해 예산안 의결 연기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농식품분야 예산안(해양경찰청 제외)으로 1조8,058억 원 증액된 20조3,929억 원 의결할 방침.

당초 12.13일, 농식품분야 예산안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었지만 쌀 목표가격에 대한 정부와 야당의 견해 차* 크기 때문에 예산안 의결도 못해 농식품분야 예산안 처리는 답보상태. 쌀 목표가격 합의해 우여곡절 끝에 2014년도 예산을 의결한다 해도 이 예산안이 최종 농식품분야 예산안 확정 미지수. 그간 예결특위는 농식품분야 예산을 삭감 ‘1순위’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고, 농식품분야 예산이 뒤늦게 예결특위로 넘어간 만큼 심사 시간 촉박. 전체회의가 파행을 겪었던 점 감안, 예산안 처리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쌀 목표가격에 대해 합의점 찾아야 가능

※ 정부는 80kg당 17만4,083원, 야당은 19만5,901원 주장. 농해수위는 예산·법안 심사를 무기한 연기함에 따라 심의 일정에 차질 예상

자료 : 농민신문·아시아경제·한국농어민신문(2013.12.16.) / 한국농어민신문(2013.12.19.)

□ 마늘 수급안정 위해 8,000t 시장에서 추가격리

- 농식품부, 11.16일,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개최, 농협 주관으로 마늘 수급안정 위해 8,000톤 추가 시장 격리키로*. 이번 조치는 정부가 당초 올해 마늘 공급 과잉 물량을 8만6,000t으로 보고 이 가운데 4만9,000t 시장 격리키로 했으나 실제 3만7,800t에 그침에 따라 추가 격리로 목표물량 채우려는 것. 추가 격리 되면 총 격리 물량은 4만5,800t으로 목표량 4만9,000t에 근접. 정부의 수매비축 물량을 최대한 시장 격리할 계획이지만 일부 품위저하품(1,129t)은 건조 가공, 발아가 진행된 물량(645t)은 공매 실시. 이번 추가 격리 이후 마늘 가격 하락 시 추가로 수매·비축 방안 검토. 한편 겨울무 생산증가로 가격하락 우려 관련,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5,000톤 물량 자율감축, 내년 예산에 최초로 국산무 수매비축 예산 31억 원이 반영된 점 감안해 내년 초 우선 2,000톤(15억 원) 수매·비축

※ 정부와 농협 등이 지난 9월까지 수매비축 사업으로 약 4만5,800톤의 마늘이 시장 격리되면서 가격 하락세 불잡았지만, 발아 진행 등 비축마늘의 품위가 저하되는 물량의 방출이 불가피해지면서 또 다시 가격 하락 우려

※ 통마늘 도매가격(원/kg): (‘13.5월) 3,795 → (6월) 3,027 → (7월) 2,708 → (8월) 2,564 → (9월) 2,598 → (10월) 2,709 → (11월) 2,780 → (12월.상) 2,780

자료 : 농축유통신문(2013.12.16.) / 내일신문(2013.12.17.) / 농민신문·농축유통신문·이데일리·헤럴드경제(2013.12.18.) / 농수축산신문·한국농어민신문(2013.12.19.) / 농민신문·한국농업신문(2013.12.20.)

참조 : 농식품부 보도자료_「’13년산 마늘 추가 시장격리, 건조가공 등 보완대책 추진」 도입(2013.12.17.)

□ 남부지역 ‘논 3모작’ 재배기술 개발

- 농진청, 12.12일, 벼와 조স্য료를 세 차례 이어짓는 **3모작 재배기술 개발**. 남부지방 3모작 재배를 위한 현장 실증연구를 통해 **5월 조생종 벼<조평>, 9월 하파귀리<하이스피드>, 11월 호밀<곡우>** 품종 이어짓는 재배기술 확립. **안정적인 쌀 생산, 이모작 재배보다 조স্য료를 한 번 더 생산**. 삼모작 재배기술의 현장 적응성 검토 위해 전북 익산지역에서 호밀(곡우) 파종(2012.11.1.)-수확(2013.4.30.) → 조생종 벼(조평) 파종(2013.5.6.)-수확(8.22.) → 하파귀리(하이스피드) 파종(8.28.)-수확(10.27.). 현장실증 평가에서는 1ha당 벼 재배 682여만 원, 하파귀리 276여만 원, 호밀 139여만 원 등 모두 1,097여만 원의 소득을 올려 **벼+보리 이모작 보다 소득 35% 많아. 내년까지 논 삼모작 실증시험 거쳐 2015년부터 남부 평야지역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 이 같은 3모작 재배법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러 보완조치*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

※ △경종농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생산된 햅쌀의 안정적 판매를 위한 계약재배나 공공매입 품종으로 지정하는 전략적 접근 뒷받침, △조স্য료도 사전계약에 의한 참여자 확보와 단위가격 책정, 지불방법 관련 협의 전제. 특히 개별농가보다는 조স্য료 수확과 유통을 하고 있는 규모화된 경영체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정역할 필요

자료 : 농민신문·농수축산신문·한국농어민신문·한국농정신문(2013.12.16.) / 한국농업신문(2013.12.20.)

□ 환경부, 내년 농식품부와 가축사육제한거리 재설정 검토

- 환경부, 12.12일,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완화 방안 집중 검토**키로. 2011.10.14일, 지자체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주거밀집지역 가구 최소단위를 5~10호로 정하고 축종별로 소·말 100m, 젖소 250m, 돼지·개·닭·오리 500m 거리제한 두도록 권고한 바 있었으며 이후 지자체별 이 같은 중앙 정부의 지침을 근거로 **가축사육에 대한 조례 강화**하면서 축산 농가들, **축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 비난**. 또한 **무허가 축사**에 대한 **개선 대책**도 마련, 2020년까지 농협 주도아래 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 30개소 설치·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 중, 특히 **가축분뇨**는 전체 오폐수 발생량의 1%에 불과하나 **수질오염 부하량**은 **전체의 37%**에 달하는 만큼 환경부·농식품부 간 공조 통한 협업

자료 : 농수축산신문(2013.12.16.)

□ 원유생산 쿼터이력관리제도 도입

- 낙농수급조절협의회, **전국단위 수급조절 운영규약 제정(2014.3.11일부터 본격 시행. 전국쿼터제의 안정적 제도운영, 낙농가간 형평성 유지** 위해 모든 참여 집유주체 소속 낙농가의 쿼터 총량기준(기준쿼터)을 2010.12월 말 기준(218만1,000t)으로 결정. 2013.5월 조사된 225만8,000t을 관리쿼터로 설정, 집유주체가 임의로 쿼터 증량 제한. **▲집유주체 간 형평성 문제 해소**...전국적으로 원유 생산 증가 시 2013.5월 조사 때 2010.12월 말 기준쿼터보다 초과된 집유주체의 쿼터를 우선 감량 조정하되, 반대로 원유 생산량 부족 시 같은 기간 쿼터를 감량한 집유주체의 쿼터 우선 증량, **▲원유생산 쿼터의 투명한 관리** 위해 **‘쿼터이력관리제도’ 도입***...일시적인 수급불안 현상 발생하면 집유주체 간 자율적인 협조 아래 원유 전수배 조치로 대응하되, 수급불안 현상이 악화되면 다양한 정책수단 활용해 그 요인 차단, **▲운영규약 실효성 제고**...전국단위 원유수급조절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집유주체나 낙농가들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정책사업에서 배제하는 등의 추가대책 마련

※ 전국단위 수급조절제에 참여하는 모든 집유주체는 매월 말일 자 기준으로 현재 개발 중인 ‘전국쿼터조사시스템’에 소속 낙농가가 보유한 쿼터와 상속이나 증여, 인도·인수, 감량 등 변동 사항을 익월 15일까지 신고

자료 : 농민신문(2013.12.20.)

□ 내년 상반기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도입

- 농식품부, 12.12일, 제5차 양돈수급조절협의회, 국내 양돈산업 경쟁력 높이기 위해서는 **사료값 안정이 필수요건**, 사료가격 투명성 확보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도입, 업체별 가격비교표 공개** 등 적극 시행. **▲현재 90% 이상이 벌크 형태로 유통되고 있는 사료업체 현실 반영해 사료값을 지대에 직접 표시하기보다는 벌크 1kg당 품목별 공장도 가격을 사료업체 홈페이지 등 공개. ▲농가들이 제품별 공장도 가격과 영양성분 등을 쉽게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사료협회를 통해 가격·성분 등 조사하도록 하고 농식품부 홈페이지 통해 공표. ▲사료가격 공개와 함께 축종별·별 표준 영양소 요구량을 정확히 따져 농가에 공개***

※ 현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사료의 영양소가 과다해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곡물 자원을 낭비하고, 사료값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

자료 : 농민신문(2013.12.16.)

□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도입

-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법률시행령 12.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도입** 및 **우수기술 등의 사업화제품화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환경부 등 7개 부처는 이미 이러한 신기술 인증제 운영하고 있지만 **농식품부만 이런 인증제 없어** 농림식품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도 자금 부족 등으로 사업화·제품화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 많아. ▲**개정 시행령 내용**…신기술 인증 기준, 신기술 인증 예정 공고 및 이의신청 등과 함께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진흥자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등에서 자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농식품부 장관은 인증 받은 신기술을 토대로 생산된 제품을 공공기관 등이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

※ 농림식품과학기술 중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발한 우수한 기술 등을 인증하는 제도 신기술로 인증 받으면 기술을 담보로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등의 혜택

자료 : 농민신문(2013.12.16.) / 원예산업신문(2013.12.18.)

참조 : 농식품부 보도자료_「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도입(2013.12.13.)

□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촌 맞춤형 정책지원사업 추진하기로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최근 예산심의를 통해 **내년부터 농촌 맞춤형 정책 지원사업 추진**. 여성농업인에게 필요한 창업지원형태의 ‘**농촌 특화형 새일센터**’ 3개소, 농어촌지역의 성폭력 예방교육 기회제공 위한 ‘**이동형 성문화센터**’ 4개소 설치. 윤명희 의원, 올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와 예산심사를 통해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농촌 맞춤형 정책지원’의 필요성 강조. 여성가족부는 농촌 맞춤형 정책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이들 사업과 함께 ‘**농촌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식품가공업**’, ‘**농촌의 환경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사업**’ 등 여성들이 선호하는 **농촌여성 창업지원 정책**도 병행

자료 : 농수축산신문(2013.12.19.)

연구 지원 정보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 본 자료는 2013년 12월 19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결과」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개편배경

- **현재 소비자물가지수**는 기준년도(현재 2010년)의 가구 소비구조 반영한 가중치를 5년간 고정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실제 가구의 소비구조와 격차 폭 확대**
- 따라서, 가구의 소비구조 변화 등을 반영한 최근의 가중치로 개정하여 소비자물가지수의 현실설명력을 제고할 필요

□ 가중치 개편내용

- **[개편주기] 현행 5년 주기 지수개편**(품목 조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지수 개편)을 유지하면서 중간에 가중치만 별도 개편
 - ※ 0, 5자년 기준 가중치 → 0, 2, 5, 7자년도 기준 가중치로 개편주기 단축
- **[품목별 가중치 산출]** 가계동향조사 소비지출항목 지출액을 이용하여 **물가품목 가중치 산출**
 - 가계동향조사 항목과 1:1(多:1)로 대응되는 경우 해당 지출액으로 적용
 - ※ (가계) 맷쌀 → (물가) 쌀
 - 가계동향조사 항목과 1:多로 대응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가계특별조사 결과와 관련 협회, 상장회사 매출액 등을 이용하여 배분
 - ※ (가계) 감귤류 → (물가) 귤, 오렌지
 - 가계동향조사 항목이 품목과 대응되지 않는 경우 유사품목에 포함시키거나 해당항목이 포함된 분류 내에 비례 배분
 - ※ (가계) 버터 → (물가) 참기름, 식용유
- **[품목별 가중치 조정]** 지역별·연도별 편차가 큰 **채소, 과일 등 농산물**, 내구재, 일부 서비스품목 등의 경우 가계동향조사 직전 3개년 평균 사용
 - 가중치 기준기간 이후의 중요한 소비구조 변화 반영

□ 가중치 개편결과

1) 가중치 변화

○ [지출목적별 가중치 증가]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부문, 의류 및 신발부문,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부문

○ [지출목적별 가중치 감소] 주류 및 담배부문, 교육부문, 기타 상품 및 서비스부문

<지출목적별 가중치 변화>

지출목적별	' 10년 (A)	' 12년 (B)	차이 (B-A)	지출목적별	' 10년 (A)	' 12년 (B)	차이 (B-A)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135.9	139.0	3.1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37.9	38.2	0.3
· 빵 및 곡물	22.8	23.3	0.5	· 가정용 가구 수리 서비스	3.1	3.8	0.7
· 육 류	23.5	24.2	0.7	보 건	73.1	72.9	-0.2
· 어류및수산	15.2	14.7	-0.5	교 통	109.2	111.4	2.2
· 과자,빙과류및당류	9.2	10.2	1.0	· 개인운송장비 연료및운활유	48.8	52.2	3.4
· 기타 식료품	9.5	10.7	1.2	통 신	57.8	59.1	1.3
주류 및 담배	12.4	11.8	-0.6	오락 및 문화	53.0	53.0	0.0
· 담 배	8.5	7.7	-0.8	교 육	114.1	103.5	-10.6
의류 및 신발	62.3	66.4	4.1	· 유치원납입금	6.9	4.9	-2.0
· 캐주얼의류	15.1	17.9	2.8	음식 및 숙박	120.4	121.6	1.2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169.7	173.0	3.3	기타 상품 및 서비스	54.2	50.1	-4.1
· 주택임차료	91.8	92.8	1.0	· 보육시설이용료	10.0	3.4	-6.6

○ [품목성질별 가중치 증가] 공업제품, 전기·수도·가스

○ [품목성질별 가중치 감소] 서비스

<품목성질별 가중치 변화>

지출목적별	' 10년 (A)	' 12년 (B)	차이 (B-A)	지출목적별	' 10년 (A)	' 12년 (B)	차이 (B-A)
농축수산물	77.6	77.6	0.0	· 석유류	53.5	56.7	3.2
· 농산물	43.5	44.1	0.6	· 의약품	13.9	13.4	-0.5
· 축산물	22.1	22.2	0.1	· 화장품	12.6	13.2	0.6
· 수산물	12.0	11.3	-0.7	· 기타 공업제품	52.0	53.7	1.7
공업제품	317.7	326.6	8.9	전기·수도·가스	48.3	49.0	0.7
· 가공식품	69.0	71.8	2.8	서비스	556.4	546.8	-9.6
· 내구재	52.3	51.6	-0.7	· 집세	91.8	92.8	1.0
· 섬유제품	54.6	58.3	3.7	· 공공서비스	143.7	142.6	-1.1
· 출판물	9.8	7.9	-1.9	· 개인서비스	320.9	311.4	-9.5

2) 개편효과

○ 가중치 개편으로 2013.11월 전년동기비는 (2010년 기준) 1.2% → (2012년 가중치 기준) 1.3%로 0.1%p 상승

※ 개편연도별 신·구 등락률 차이(%p): ('91) -0.3 → ('96) -0.1 → ('01) -0.3 → ('06) -0.2 → ('11) -0.4

-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의 정책적 요인으로 인해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가중치가 낮아진데 기인하여 전년 동기대비로 0.13%p 상승

<지출목적별지수 등락률 비교>

단위: 11월 기준, 전년 동기대비, %, %p

지출목적별	2010년 가중치(A)		2012년 가중치(B)		차이(B-A)	
	동기비	기여도	동기비	기여도	동기비	기여도
계	1.2	1.22	1.3	1.32	0.1	0.10
·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0.5	0.08	1.0	0.14	0.5	0.06
· 주류 및 담배	1.6	0.02	1.7	0.02	0.1	0.00
· 의류 및 신발	2.7	0.17	2.8	0.19	0.1	0.02
·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3.5	0.61	3.5	0.61	0.0	0.00
·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	0.2	0.01	0.2	0.01	0.0	0.00
· 보건	0.6	0.04	0.3	0.02	-0.3	-0.02
· 교통	-0.5	-0.06	-0.5	-0.06	0.0	0.00
· 통신	0.0	0.00	-0.1	-0.01	-0.1	-0.01
· 오락 및 문화	1.1	0.05	1.1	0.06	0.0	0.01
· 교육	1.0	0.11	1.2	0.13	0.2	0.02
· 음식 및 숙박	1.4	0.17	1.5	0.19	0.1	0.02
· 기타상품 및 서비스	-1.6	-0.08	0.4	0.02	2.0	0.10

<품목성질별 지수 등락률 비교>

단위: 11월 기준, 전년 동기대비, %, %p

품목성질별	2010년 가중치(A)		2012년 가중치(B)		차이(B-A)	
	동기비	기여도	동기비	기여도	동기비	기여도
· 총지수	1.2	1.22	1.3	1.32	0.1	0.10
· 농축수산물	-0.9	-0.07	-0.3	-0.03	0.6	0.04
· 공업제품	0.7	0.24	0.8	0.27	0.1	0.03
· 전기·수도·가스	4.6	0.23	4.5	0.22	-0.1	-0.01
· 서비스	1.3	0.73	1.6	0.85	0.3	0.12

※ 자료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